

**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2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1.

발 의 자 : 이헌승 · 조경태 · 박성민  
백종헌 · 서지영 · 김선교  
강선영 · 서일준 · 박성훈  
박덕흠 · 정성국 의원  
(11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,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아울러 장애인,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,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

불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,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45조의7 및 제294조의4).

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5조의7제1항 중 “사람(고발인을 제외한다)은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294조의4제1항 중 “재판장에게”를 “법원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판장은”을 “법원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판장은”을 “법원은”으로, “열람”을 “결정으로 열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재판장이”를 “법원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4항에 관한 재판에”를 “제4항의 결정에”로, “불복할”을 “즉시항고를 할”로, “없다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- 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5조의7(고소인 등의 이의신청)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<u>사람(고발인을 제외한다)</u>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	제245조의7(고소인 등의 이의신청) ① ----- ---- <u>사람은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)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<u>재판장에게</u> 신청할 수 있다.	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별 <u>원에</u> -----.
② <u>재판장은</u>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	② <u>법원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, 심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.

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<신 설>

⑤ (생략)

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③ 법원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결정으로 열람-----  
-----.

④ 법원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⑦ -----제4항의 결정에-----  
-----즉시항고를 할----있다.